

최태원, '에너지·AI·저출산 대응' 韓日 핵심협력 분야 제시

(SK그룹 회장)

닛케이포럼 '한일특별세션'

양국 정·재계 인사 협력방안 논의 최 회장, 한일경제연대 필요성 강조 "국제질서 만드는 '롤 메이커' 도약"

"한일 협력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실행력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기반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존을 위해 경제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9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닛케이포럼 '한일특별세션'에 참석해 정·재계 인사들과 함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일본 경제지 닛케이가 주최하고 SK그룹과 최종현학술원이 기획했으며, 양국 정·재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SK수펙스

기조연설에 나선 기사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인 두 나라 관계를 위해 공급망, 에너지, AI 등의 분야에서 경제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며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고령화와 구조적 집중 문제 해결에도 양국 협력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공통

가치를 가진 한일이 세계적 격변기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024년 제안한 '한일경제연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자유무역 질서 약화, 미·중 갈등 심화,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등 공통 과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한일경제연대는 양국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 '롤 메이커'로도 약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에너지, AI, 저출산 대응을 양국이 함께할 수 있는 핵심 협력 분야로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중동 외 지역의 에너지 공동개발과 차세대 배터리 연구,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협력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공동 진출해 국제 표준 형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분야에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일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공유와 공동 인프라 구축, 규범 표준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출범한 '한일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소개하며 육아 환경과 기업 문화,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실천 모델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최 회장은 협력이 정치적 상황이나

제도 차이에 흔들리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상설 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기업, 학계,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의제를 한데 모아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자는 구상이다.

도쿠라마사카즈스미토모화학고문(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차세대 혁신 원전 개발에 공감했고, 가토 마사히코 미즈호은행 행장도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LNG 분야 협력을 통해 한일경제 연대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규 SK그룹 일본총괄(사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한일경제연대가 두 나라 생존을 위해 가야 할 길이라는 공감대가 넓혀지고 있다"며 "올해 첫 한일특별세션 개최를 계기로 AI, 에너지, 저출산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두 나라 미래세대가 공존, 발전하기 위한 한일경제연대를 구체화하는데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외환당국, NDF 정조준... DF 흡수방안 검토

(차액결제선물환)

(실물인도선물환)

환율대응 '레벨방어→쏠림차단' 이동 투기적 움직임 점검... 실효성 관건

외환당국이 원·달러 환율 1560원 돌파 이후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공개적으로 겨냥하면서 외환시장 대응의 초점이 '레벨 방어'에서 '쏠림 차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구두개입 이후 환율은 1530원대로 내려왔지만, 역외 거래와 연장거래 수급이 다시 한쪽으로 쏠림 경우 당국 대응의 실효성은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8일 외환시장 메시지를 통해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수급 요인 이외에도 NDF 등 일부 투기적 외환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일 서울 외환시장 중간거래에서 1539.1원에 마감한 뒤 같은 날 야간거래에서 1560원선을 넘어섰다. 이후 외환당국이 주말 긴급 회의를 열고 투기적 외환거래와 시장교란 의심 행위에 대한 대응 방침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빠르게 당국 경계감을

반영했다. 관계기관의 대응은 이를 연속 이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현승 한국은행 총재, 이억민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원인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중동 긴장 고조와 미국 금리 인상 전망, 외국인 주식 매도 등 수급 요인과 함께 일부 투기적 거래가 환율 쏠림을 가속화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대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당국이 NDF를 공개적으로 지목했다는 점이다. NDF는 실제 원화를 주고받지 않고 만기 때 계약 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액만 달러로 결제하는 역외 선물환 거래다. 원화가 국제적으로 완전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는 구조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원화 방향성에 베팅하거나 환헤지를 할 때 주로 활용한다.

NDF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역외 가격이 국내 현물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역외에서 형성되는 NDF 가격은 서울 정규장이 열리기 전 국내 환율 기대를 먼저 반영한다. 특히 거래가

은 시간대에 달러 매수 수요가 한쪽으로 몰리면 실제 국내 수급보다 원화 약세 기대를 더 빠르게 키울 수 있다.

관계기관은 NDF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역외 NDF 거래를 국내 실물인도선물환(DF) 거래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이나 시장교란 의심 행위를 점검하고, 위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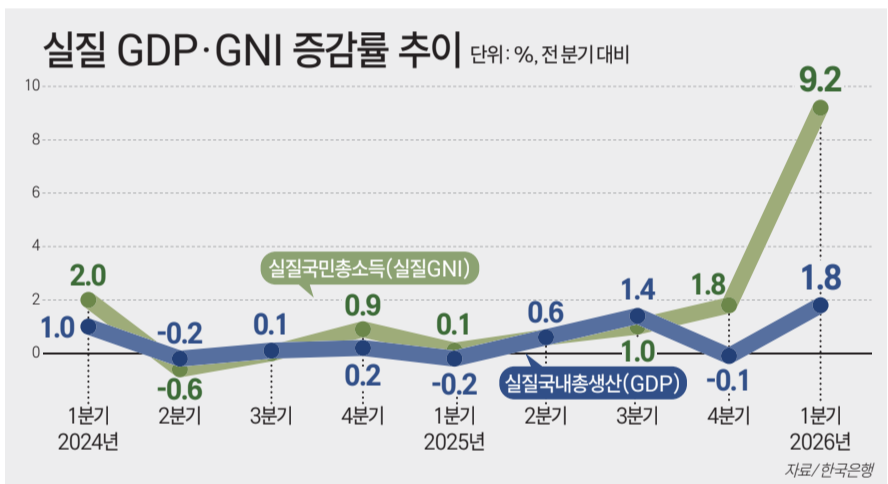
관건은 실효성이다. 구두개입은 시장 심리를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지만, 역외 거래와 연장거래 수급이 다시 한쪽으로 쏠리면 환율 변동성은 재차 커질 수 있다. NDF 투명성 제고와 DF 흡수 방안은 제도 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주식 매도세와 달러 수급, 중동 리스크, 미국 금리 전망이 환율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외환당국이 NDF를 정조준한 만큼 시장의 관심은 구두개입 이후 실제 거래 투명성 제고와 DF 흡수방안이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될지에 쏠리고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1분기 성장률 1.8%... 실질 국민소득 9.2% ↑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설비투자 주요

올해 1분기 한국경제가 전기 대비 1.8% 성장하며 속도치보다 0.1%포인트(p) 상향했다. 반도체 등 정복기술(IT) 품목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을 이끈 가운데 교역조건 개선 영향으로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9.2% 급증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8%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8% 성장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속도치보다 0.1%p 높은 수준이다. 속도치 추계 당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월 일부 실적치가 반영되면서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등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상향 수정됐다.

생산 측면에서는 제조업이 성장을 이끌었다.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3.9% 증가했다. 건설업은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면서 2.2%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0.6% 늘었다.

지출항목별로는 설비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며 전기 대비 6.6%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5.9% 늘었다.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이 증가해 3.9% 확대됐다.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 0.6% 증가했다. 의류 등 재화 소비와 금융 등 서비스 소비가 함께 증가한 영향이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면서 1.4% 증가했다. 반면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줄면서 0.4% 감소했다.

국민소득 지표는 성장률보다 더 크게 뛰었다. 1분기 실질 GNI는 전기 대비 9.2%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2% 늘었다. 실질 GNI 증가율이 실질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돈 것은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늘어난 영향이다.

명목 GDP도 큰 폭 증가했다. 1분기 명목 GDP는 전기 대비 10.5%, 전년 동기 대비 17.1% 성장했다. 피용자보수는 제조업 임금 상승 등으로 전기 대비 4.0% 증가했고, 총영업잉여는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17.0% 늘었다.

저축률은 높아지고 투자율은 낮아졌다. 1분기 총저축률은 41.7%로 전기 대비 5.7%p 상승했다. 반면 국내총투자율은 25.3%로 2.9%p 하락했다. 가계순저축률은 8.8%로 전기 대비 0.3%p 낮아졌다.

함께 발표된 연간 국민계정에서 1인당 GNI는 5257만원으로 전년보다 4.6% 늘었고,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3만693달러로 0.3% 증가했다.

/김주형 기자



metro

구윤철 "물가 부문 주요품목 할당관세 검토"

"필요시 과감한 수입확대 등 관리"

정부가 소비자물가억제에 총력을 기울인다. 주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또 필요시 수입 물량을 과감히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사진)은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정부는 환율·물가·금리 안정의 3대 목표를 가지고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구부총리는 "특히 물가 부문에 있어서는 할당관세 또는 공급 확대, 필요하다면 과감한 수입 확대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중동 사태에 따라 구성된 비상경제본부에서 거시경제-물가대응반장을 맡고 있다.

또 산업통상부 등의 에너지수급반은, 석유최고가격제 시행 덕분에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3주째 내리며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향후 전국평균 대비 리터(L)당 약 20원 저렴한 '착한 주유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우수주유소인 이른바 '착하다 착한 주유소' 대상의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해 가격안정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긍정적 흐름을 기업과 산업의 활력으로 연결해, 중동전쟁 이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유럽순방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